

범여권 대선구도 난기류

신당·민주당 경선 파행으로 흥행 실패... '대선 위기론' 고조

대통합 민주신당과 민주당의 국민경선이 흥행에 실패하고 조직·동원선거를 둘러싼 파행이 거듭되면서 범여권의 '대선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범여권의 경선 부진이 계속된다면 오는 11월 중순 범여권 후보단일화가 이뤄지더라도 별다른 폭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제기하고 있다.

▲범여권 경선 파행=대통합 민주신당과 민주당의 국민경선은 치열한 경쟁으로 이변을 속출시키며 국민적 관심을 이끌기보다는 조직·동원선거 공방으로 오히려 정치적 무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반환점을 통과한 대통합 민주신당과 민주당의 국민경선은 조직·동원선거 논란에 이어 부산에서의 폭력 시비, 노 대통령 명의의 도움 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1일 손학규, 이해찬

후보 측에서는 당 지도부를 잇달아 향의 방문해 정동영 후보 측의 조직·동원선거 의혹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경선 선거인단 등록과정에서 노 대통령의 명의도용을 지시한 사람이 정 후보 지지 성향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 경선 자체에 대한 회의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최저의 투표율을 찍을 수 있는 민주당의 국민경선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달 30일 조순형 후보가 이인제 후보의 조직·동원선거 의혹 및 외부세력 개입 주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중단한 상태다.

▲범여권 경선 회의론= 대통합 민주신당과 민주당의 경선이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면서 범여권 경선 회의론과 함께 대선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다.

범여권 경선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경우 국민의 외면으로 범여권 대표 주

자들의 지지율은 10% 안팎에 머무를 것이며 이는 범여권 후보단일화의 효과를 저하시켜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합 민주신당과 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현재의 경선 구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 계기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도 조순형 후보의 경선 복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범여권 후보단일화와 정권 재창출에 밀알이 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적 감동과 흥행이 없는 현재 범여권의 경선 구도로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맞설 대항마를 선출할 수 없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각 당의 지도부와 후보들의 보다 근본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조직·동원선거 의혹 현장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손학규측 김영주, 정봉주, 이상호 의원 등이 1일 국회대표실을 찾아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자 회의중인 신당 지도부가 당황해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대통령 명의도용 지시' 區의원 出禁

노무현 대통령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일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 선거인단에 노 대통령의 이름을 허위등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서울 구의회 의원 정모(45·여)씨를 출국 금지했다.

경찰은 전날 저녁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서울 종로구 정씨 집을 덮쳤으나 정

씨는 이미 휴대전화를 버리고 잠적한 뒤였다. 경찰은 우선 정씨의 출국을 금지한 뒤 조만간 체포영장을 신청해 본격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자신의 아들인 박모(19)군 등 대학생 3명에게 시간당 5천원의 아르바이트비를 주기로 하고 노 대통령 등 정치인과 연예인 등 유명 인사

들의 명의를 도용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정동영 후보는 1일 자신의 캠프측 인사인 정씨가 노 대통령을 무단으로 선거인단 명단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 "경위가 어쨌든 노 대통령께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대전 배제대에서 열린 대전·충남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孫·李, 모바일 투표 '역전' 기대

투표인단 모집 열올려... 후보간 '모바일 동원' 논란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 전반전에서 정동영 후보의 조직력에 밀리고 있는 손학규, 이해찬 후보가 모바일(휴대전화) 투표에 사활을 걸었다.

지난달 30일 부산·경남 경선을 포함한 8개 지역 순회경선 결과 정 후보는 누적 득표수에서 5만1천125표(43.1%)를 얻어 3만7천851표(31.9%)를 확보한 손 후보에게 1만3천여 표 앞서 있다. 2만9천641표(25%)로 3위를 차지한 이 후보와는 2만1천여 표로 차이다.

하지만, 지난달 10일까지 대통합민주신당이 선거인단 접수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를 위탁한 명단 중 아직까지 경선을 치르지 않은 지역의 선거인단은 모두 82만여 명이나 된다.

또 당이 지난달 11일부터 30일까지 추가 접수한 투표소 투표 선거인단은 30만여 명이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바일 투표 선거인단은 7만여 명이다. 또 오는 10일까지 추가 접수되고 있다.

명부 확인 절차를 거쳐 중보 및 허위 접수자 등을 제외하더라도 남아있는 지역 경선 지역과 모바일 투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1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까지 8개 지역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10만여 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투표에 따라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특히 모바일 투표의 경우 조직력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모바일 투표인단 모집에는 30일까지 7만7천여 명이 등록했고, 마감시한인 내달 10일까지 하루 평균 1만여 명이 등록한다고 가정할 때 20만 명 안팎에 달할 것이라는 게 신당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당초 목표로 했던 200만 명에는 크게 미달하는 규모지만, 20% 안팎에 불과했던 지역순회 선거인단 투표율에 비해 모바일 투표의 참여율은 50%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판세를 한번에 바꿀 수 있는 규모다.

모바일 투표가 판세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면서 후보 간 '모바일 동원'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정 후보 측은 이 후보 측이 노트북을 대량으로 임대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조직적으로 모집하고 있다며 '노트북 떼기' 의혹을 제기했고, 손·이 후보 측은 정 후보 측이 콜센터를 차려놓고 대리접수를 받고 있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한 데 이어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장과 시각

광주商議, 감투싸움 할때가



이종태

경제부 차장

차기 회장 선출을 둘러싼 광주상공회의소의 진동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

광주상의 상임위원회는 1일 차기 회장 선출에 관한 논의를 위해 자리를 맞 앉았다. 남은 것은 상처 뿐이었다. 마형철 전회장을 지칭하는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에 대해 출마제한 규정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상임위원들이

두 편으로 갈려 옥신각신 하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전체회의 모이는 총회로 공을 넘기고 말았다. 지난해 3월 19대 회장과 상공의원 선거과정에서 불법투표 시비 등이 불거져 법정소송까지 가는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상의의 구태는 1년 반 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

최근 광주상의는 말쑥했던 정관과 선거규정을 새롭게 바꾸면서 모처럼 지역민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줬다. 정관개정을 마친 상공의원들은 '공주발전'을 위한 책임있는 경제단체'로 거듭나자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결의는 새로운 집행부의 임기 개시 일과 보궐선거 원인제공자의 출마제한 관련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상공의원들이 충돌하면서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다.

결국 차기 회장직을 둘러싸고 상공의원들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광주상의의 정상화는 정관개정 이전보다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임시총회도 크게 기대할 것이 없을 듯하다. '보궐선거 원인제공자'의 재출마를 반대하는 의원들과 재출마를 지지하는 의원들의 입장이 서로 갈릴 경우 총회가 상공위원회의 재단이 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광주상의의 파행을 보는 지역경제인들의 심사는 과롭기만 하다. 회원업체인 하남산단내 A사 대표는 "그간 광주상의가 해온 사업이 한자검정이나 컴퓨터 교육 외에 지역기업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느냐"면서 "차기회장 선거는 '그들만의 리그'일 뿐 우리는 관심없다"고 말했다.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자금·인력난으로 고전하는데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국내외로 동분서주하는데도 광주상의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경제인들은 분노한다.

올해로 광주상의는 72돌을 맞는다. 나이에 맞게 지역발전을 위한 '어른'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럴듯한 사업 하나 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정관이라는 옷으로 바뀌 입은들 무슨 소용 있겠는가.

지역발전이 아니라 회장직을 둘러싼 감투싸움을 지역민들에게 보여주는 상의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오는 25일 임시총회가 지역경제인들의 화합을 위한 축제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jtleee@kwangju.co.kr

DJ 후보단일화 의중 밝히나?

4~5일 광주 방문

지난달 29일 12박13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는 4일과 5일 자신의 정치적 모태인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대통령이 광주 방문을 통해 범여권 경선 및 후보단일화 등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혀 범여권의 분방을 촉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동교동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4일 오후 광주에 도착,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고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조형물 점등식에 참석한다.

또한, 5일 열리는 디자인비엔날레 개막식에서 '세계 디자인 평화선언'과 관련한 기념 메시지를 낭독할 예정이다.

김 전 대통령의 이번 광주 나들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광주 방문은 시기 문제를 고려할 때 상당한 정치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

고 있다.

우선 미국에서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독이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광주를 방문한다는 점과 상황이 범여권에 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대통령이 광주 방문에서 범여권의 경선 및 후보단일화에 입장을 간접 화법을 통해 밝히는 한편 호남 민심에 민주·개혁세력의 결집을 촉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교동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의 광주 방문은 박광대 광주시장과 광주 비엔날레 측의 초청에 따라 올해 초 약속된 것"이라며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이나 메시지는 없을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미 대통합 민주신당의 광주 경선도 끝났는데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등 일반적인 정치 현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노후를 신상하게! 미래를 희망하게!

제2회 전국노인건강대축제 목포에서 열려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목포시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축제는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생활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

- 10월 12일(토) 09:00~12:00 - 노인 건강검진 (신체검진, 혈액검사, 치과검사 등)
- 10월 12일(토) 13:00~17:00 - 노인 문화공연 (노년극, 노래, 춤 등)
- 10월 13일(일) 09:00~12:00 - 노인 건강강좌 (노년학, 노년심리학 등)
- 10월 13일(일) 13:00~17:00 - 노인 건강행진 (목포 시내를 돌며 걷기)

문의: 목포시 노인복지센터 (061-270-1234)